

# 우유생산조절제도(안)의 행정

지난 7월 11일 정부의 우유생산조절 실시요령(안)이 발표되기를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행정예고 되었다. 이와 관련하여 많은 회원들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당협회로서는 이사회(제 5 회)를 소집하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키로 결정을 보았다. 아래 대안은 지난 7월 31일 정부측에 정식 제출된 원문 그대로 우리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수록하였다. (편집자 주)

## 협회대안

당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금번 정부의 우유 생산조절안은 유가공업체에만 유리하게 되어있으며, 아직도 우유소비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므로 전체회원의 의사에 따라 본 예고안의 시행을 전면 거부한다.

## 1. 이유

### 가. 한국낙농의 현위치

- 한국의 낙농은 60년대부터 정부낙농 진흥정책의 지속적 추진결과 성공적 기반이 다져진 사업으로 발전되어온 것은 사실임.
- 그러나 한국낙농은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못하여 생산기반이 다져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  - 국민소득과 균형을 이룰수 있는 수준까지 육성되어야 하며
  - 현행 평균 10두에서 90년대, 2천년대 국민소득과 균형있는 수준으로 육성시켜야 할것임.
- 현재까지 한국의 낙농은 관 주도형의 낙농가육성과 유가공업 육성을 하여왔음. 그러므로 90년대, 2천년대 한국 경제수준에 합당한 전업낙농가 육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.
- 우유의 소비선전은 현재까지 유가공업체의 상표위주를 탈피치 못하여 왔음. 우유소비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음.
- 우유는 아직도 소비신장의 여지가 남아 있음.

### 나. 우유 생산조절 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반응(여론)

- 우유 생산조절 제도는 유가공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이다. (쿼터 초과우유는 기준가격 이하로 납유하게 되므로 유가공업체에만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제도)

# 예고에 대한 당협회 대안

- 중앙정부는 빠지고 지방정부와 유가공업체에게 일임시키고 있다.
- 현 국민소득 수준 2,300\$에 상응하는 생산규제를 해달라, 계약기준이 너무 적다.  
(80kg는 4두 착유분 즉, 평균10두 기준에 불과하다.)
- 납유기준년도는 '86년도로 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'87년도로 하여야 한다.
- 생산조절 발표후 젓소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.
- 신규 낙농가의 납유할 곳이 없다. 왜 정부는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만해 놓고 대책이 없는가?
- 우유도 농산물이므로 쌀, 보리, 양파, 마늘과 같이 구매자금을 지원해달라.
- 도태보상을 해달라.
- 유가공업체는 우유가 아닌 제품선전에 치중하고 있다.
- 정부와 축협의 우유소비홍보는 전무한 상태이다.
- 집유제도가 일원화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유 생산조절은 낙농가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이므로 시행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.
- 외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의 우유 생산조절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유제품 수입을 즉각 중지하라.

## 2. 건의사항

한국낙농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확립하기 위하여 낙농가, 유가공업체, 정부, 학계가 연구와 업무를 분담하여 합동대처하여 주기 바람.

### 가. 낙농가

- 송아지에게는 모유먹이기를 재 다짐한다.
- 유대에서 일정액을 자진하여 낼 것이며(자조금으로)우유소비홍보 촉진사업에 적극 참여 하겠음.
- 일정수준 이하의 저능력우(목장별 평균산유량 80%수준 이하의 저능력우)를 자진 도태 실시 하겠음.

### 나. 유가공업체

- 조제분유에 전지분유 함량을 높여서 체화 해소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(450g켤에 국산분유 100g에서 160g으로)

## ■ 우유생산 조절제도(안)의 행정예고에 대한 당협회 대안 ■

- 우유 및 유제품의 신제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것.
- 유가공업체에서 우유와 유제품 판매를 잠식하는 유사음료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별도 법인명의로 제조 판매할것.
- (우유와 유제품은 유사음료보다 값이 비싸고 판매이윤이 적어 우유판매신장에 직접 영향이 있음)
- 유가공업체의 판촉예산의 몇십%는 우유소비 공동홍보비로 낼것.
- 버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유가공업체가 이윤이 적고 버터 생산후 남는 탈지분유 판매를 이유로 제조를 기피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버터는 더 생산하고 탈지분유는 보관기간이 긴 대용유 제조 원료로 사용하여 수입 대체토록 할 것.

### 다. 정부

- 우유도 필수식량 차원에서 정책배려하여 줄것.
- 정부는 우유소비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것.
- 우유 수유자금의 유업체지원으로 유대의 지불 지연이나 분유가 체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이며, 유업체 운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제품개발 및 소비홍보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행정조치하여 줄것.
- 유가공업체로 하여금 버터생산이 배가되도록 유도하고 버터생산후 남는 탈지분유의 처리 방안으로 일부 정부가 지원할것.
- 수입 유제품을 극소화 시켜 국산대체 가능분은 전량 국산으로 대체하여 줄것.
- 배합사료에는 장기보관분의 분유를 사용함으로써 분유체화 해소 대책에 사료업계도 참여토록 하여 줄것.
- 저능력우 도태는 정부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내의 도태우는 보상하여 줄것.

### 라. 결론

본협회는 우유소비 신장 가능 부분부터 정부중재하에 분야별로 신중히 검토 합의하여 착수하여 줄것을 원하며 현재 상존하고 있는 유가공업체의 유 검사 불합리성으로 입는 낙농가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 검사의 공영화와 집유일원화가 선행되어야만 생산조절은 가능할 것이므로 금번예고안은 일단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금번 생산조절안은 전 낙농인들을 몰살하는 정책이므로 위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우리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본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침신합니다.